

최고인민법원 :

형벌로 모든 범죄행위와 투쟁해야

최고인민법원은 23일 전문회의를 소집하고 형사재판 기능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법에 따라 범죄를 징벌하고 인민을 보호하며 형벌로 모든 범죄행위와 투쟁할 것을 각급 법원에 요구했다.

최고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사회질서를 엄중히 해치고 사회안정을 파괴하며 인민대중의 생명건강과 재산안전을 해치는 범죄를 법에 따라 엄하게 단속하고 실제 행동으로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사상을 실현하여 인민대중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을 끊임없이 증강시켜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반대편과 엄정처리를 병행하는 형사정책을 견지하고 징벌과 예방을 병행하며 지엽과 근본을 함께 다스려야 한다. 중대한 악성범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에 따라 엄하고 중하게 처벌하며 제때에 심리, 판결하여 인민대중들이 공평과 정의를 확실하게 느끼도록 해야 한다. 민간 모순의 격화로 야기된 범죄 및 사회생활이나 생산경영중에 발생한 경범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죄를 시인

하고 피해자의 양해를 얻었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경하게 처벌하여 범죄를 최대한 분화, 와해시키고 범죄자의 개조를 촉진해야 한다. 한 시기, 한 분야내의 다발성 사건에 대해서는 당위의 지도하에 원천 예방 통제를 추진하여 제도 우세를 관리 효과로 전환시켜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모순 위험 해소와 사회안정 수호' 특별단속 임무를 착실하게 실행하고 종합관리센터의 규범화 건설에 적극 융합하고 이를 추진하며 전문 교치(矫治) 교육, 형기 만료 석방자에 대한 배치와 협조 교육, 심각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와 구제 등에 대한 의견을 관철하고 법에 의해 각종 범죄를 징벌하며 세시대 '풍요경험'을 견지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당위의 지도 아래 관련 부문과 함께 모순과 분쟁의 근원 예방과 실질적인 해소 임무를 잘 수행하고 분쟁과 쟁점을 확실하게 하며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는 '최후방어선'을 굳게 지켜 사회의 안정과 인민의 안녕을 결연히 수호해야 한다.

/ 신화사

[유기자의 법률도우미]

한국 투자 및 인수합병 시 이런 사항 고려해야



정우원 법무법인 자유 상임고문(투자 및 인수합병 분야 전문가)

한국은 재한 조선족을 포함하여 수십만명에 달하는 중국인이 거주하거나 왕래하는 국가로 이들 사이에서 대 한국 투자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한국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2024년 9월 기준 한국에 거주하는 체류외국인중 등록외국인은 145만 9,388명인데 그중에서 중국인이 36.7%인 98만 7,280명에 달하며 그들중 다수가 경제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또한 한국무역협회(KITA)의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과 중국간 무역 규모는 약 3,000억달러로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와 같은 활발한 교류는 중국인 및 조선족들의 대 한국 투자 기회를 넓히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한국의 반도체, 바이오,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첨단산업에 대한 중국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일부 중국인 사업가들은 한국내 중소기업 투자 및 인수와 합병을

통해 한국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전년 대비 10.3% 증가했으며 그중 중화권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5% 이상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지리적 근접성과 문화적 유사성이 작용한 결과로 중국인 투자자들에게 한국 시장은 매력적인 투자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투자 및 인수와 합병 절차와 주요 고려사항

한국 법무법인 자유의 외국인 투자 및 인수합병 분야 전문가인 정우원 상임고문은 "한국에서의 투자 절차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엄격히 규제되고 있으며 각 단계에서 법적·재정적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한국에 투자할 때 다음과 같은 절차와 주요 사항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한다.

1) 시장 조사 및 진출 전략 수립

한국 시장 진출의 첫 단계는 철저한 시장 조사와 산업별 특성 분석이다. 최근, 한국 전자상거래 시장에 진출했던 한 중국 기업은 한국 소비자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예상보다 저조한 성과를 기록하며 철수해야만 했다. 따라서 한국 시장에서 성공적인 진출을 위해서는 현지 소비자 특성, 규제 및 경쟁 상황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 각별히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현지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2) 법인 설립 혹은 기업 인수

한국에서의 투자 방식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된다.

◆ 법인 설립: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로서의 등록 절차를 완료해야 하며 현지 금융 및 행

정기관과의 협력 또한 필수이다.

◆ 기업 인수: 기업 인수 시 실사(Due Diligence)는 필수적인 단계로 재무 상태, 부채, 소송 리스크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2022년 한 중국 기업이 한국의 제조업체를 인수하려 했지만 실사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대규모 채무가 발견되어 계약을 철회한 사례가 있다.

3) 계약 체결 및 법적 검토

인수와 합병 거래에서 계약서 작성은 매우 중요한 단계이다. 한국의 <외국인투자촉진법>, <공정거래법> 등을 준수하고 필요한 경우 규제 기관의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한다. 한 재한 조선족 투자자는 한국내 기업 인수 시 환율 변동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여 이후 손실을 본 사례가 있다. 이처럼 계약서 작성 시 세부 조건을 명확히 하고 법적 검토를 통해 잠재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4) 실사(Due Diligence)

실사는 투자 및 인수와 합병의 핵심 단계로 기업의 재무 상태와 법적 분쟁 가능성 등을 사전에 확인하는 과정이다. 한국의 한 바이오 기업을 인수하려던 중국 투자자는 실사 과정에서 과거 소송 기록을 발견하고 계약 조건을 조정할 바 있다. 실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계약을 재검토하거나 중단할 수 있으며 이 단계에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5) 외국환 신고 절차와 주요 류의 사항

한국에서 외국인이 주식이나 지분을 취득할 때 <외국환거래법>과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환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신고 절차를 소홀히 할 경우, 투자금 송금이 차단되거나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외국환 신고는 보통 법무법인에 위임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요

서류로는 투자자의 위임장, 취득신고서, 투자계약서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 과거에 신고 절차를 생략한 중국계 투자자가 자금 송금 제한을 겪은 사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외국환 신고를 무략하면 한국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2021년, 한 재한 조선족 투자자가 외국환 신고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자금 송금이 차단된 사례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는 데 약 3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정우원 상임고문은 말한다. 신고 절차의 엄격한 준수는 투자자금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6) 중국 기업의 한국 직접투자 분위기 및 전문가의 필요성

한국에서 성공적인 투자는 반도체와 배터리 부품산업을 포함한 제조업 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광산업 등 산업 전반에 걸쳐 고르게 분포되어야 하며 지적재산권, 정치적 리우 등으로 2024년 상반기에는 중국 기업의 한국 투자가 421건, 투자액 규모로는 29억 9,000만달러로 2018년의 27억 42,000만달러를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 기록을 경신했다. 방향의 한국 투자액(8억 3,000만달러)까지 합치면 38억달러 규모이다. 이는 전체 외국인 직접투자액 153억달러의 25%에 달하는 규모로 최근 중국의 한국 투자 인기를 반영하고 있다. 또한 전세계 1위 전기차 배터리 업체인 CATL도 2024년 한국에 법인을 세울 예정이라고 한다.

"다만 앞서 말했듯이 성공적인 한국 투자를 위해서는 한국 시장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법적 규제 준수가 필요한 만큼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라고 정우원 고문은 재차 강조했다.

/유경봉기자



판결 효력 발생전에 재산을 은닉 이전했다면 범죄 구성할 수도

최근,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 검찰원은 판결 집행 거부, 재정 거부 행사사건 처리 시 법률 적용에 나서는 약간의 문제에 관한 해석을 공동으로 발표하여 판결, 재정 집행을 거부하는 범죄를 법에 의해 징벌함으로써 인민법원의 판결, 재정 집행행위를 보장하고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실제적으로 수호한다. 곧 "판결, 재정 효력 발생전에 재산을 은닉, 이전한 경우 판결, 재정 집행 거부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명확히 지적했다.

이 사법해석은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집행 대상자, 집행 협조 의무자, 보증인 등 집행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인민법원의 판결이나 재정을 집행할 능력이 있으면서 집행을 거부하고 그 정상이 중한 경우 형법 제 313조의 규정에 따라 판결, 재정 집행 거부죄로 처벌한다. 동시에 사법해석은 '명백하게 불합리적인 고가에 타인의 재산을 양수(受让)하거나 타인의 채무에 담보를 제공하는 등 악의적으로 책임재산을 감소해 판결, 재정을 집행할 수 없게 한 경우' 등 10가지 '집행 능력이 있으면서도 집행을 거부하고 그 정상이 심각한 경우'와 '몰래들어 집행 현장을 충격하고 집행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한 경우' 등 5가지 '상황이 특별히 엄중한 경우'를 열거했다.

사법해석은 다음과 같이 규정했

다. 행위자가 집행 의무를 도피하고 소송이 시작된 후나 심판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재산을 은닉, 이전하는 행위를 행하며 판결, 재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에 그것이 조사 실증되어 집행을 요구했음에도 그 집행을 거부하는 경우, 집행 능력이 있으면서 집행을 거부한 것으로 인정한다. 또한 그 정상이 심각한 경우 판결, 재정 집행거부죄로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사건의 국외자가 집행 의무를 가진 자에게 집행할 능력이 있음을 알면서도 인민법원의 판결, 재정 집행을 거부하며 그와 공모하여 재산을 은닉, 이전하는 등 집행 거부 행위의 실행을 협조하여 판결, 재정 집행을 불가능하게 한 경우 판결, 재정 집행거부죄의 공범으로 의결한다.

동시에 사법해석은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존속부양비, 양육비, 위자료, 치료비, 로동보수 등에 대한 판결, 재정 집행을 거부하여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중하게 처벌한다. 공소를 제기하기 전에 집행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리행했거나 법외 정상이 경미한 자에 대해서는 범죄 정상이 경미한 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경하게 처벌하거나 처벌을 면제할 수 있다.

/신화사

최근, 연길시공안국 법제대대와 건공파출소에서는 연합하여 대학졸업장 발급 관련 사기사건을 해명했다.

대학졸업장 발급을 부탁했다가 사기당해

2019년 1월, 연길 시민 리모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제때에 모 대학의 졸업수속을 밟지 못했다. 이에 그녀는 '마달발' 남자친구 최모에게 졸업장을 만들어줄 사람을 구해달라고 부탁했다. 최모는 바로 인맥을 가동하여 얼마 안되어 재모를 찾았다. 최모와 재모가 통화할 때 마침 함께 식사하고 있던 남자친구 주모가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듣게 되었다. 직업을 농민인 주모는 재모와 다년간 사귀면서 적지 않은 돈을 재모에게 썼지만 아무런 '보답'도 없었고 이에 '손해봤다'는 생각이 들었던 터라 이번 일을 계기로 그녀에게서 '밀전'을 챙기려 했던 것이다. 주모는 집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조카 류모에게 연락해 모 대학교 증서 수속 일군으로 사칭했다고 상의한 후 재모에게 통지했다. 재모는 류모와 연락했고 류모는 전에 대학졸업장 수속을 한 적이 있기에 졸업증을 해결할 수 있는 확률이 100%이지만 수속 비용으로 8,000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재모가 최모에게 이 사실을 알리려 하자 주모는 중간에서 리움을 챙길 수 있다고 재모에게 귀띔했다. 하여 비용을 3만 3,700원으로 정하고 최모와 리모에게서 비용을 받았다.

돈을 주고도 졸업장을 받을 수 없게 되자 리모와 최모는 사이가 나빠졌다. 2023년 4월 최모는 재모와 여러번 연락해도 결과가 없자 화집에 건공파출소에 신고했다.

함께 사건을 처리하고 증거 체계를 보완해 성공적으로 사건 해명

신고를 접수한 후 사건 처리 경찰은 깊은 산속에서 일하고 있는 주모와 류

모, 그리고 료녕성 금주시의 집에서 놓고 있는 재모를 소환했다.

사건 처리 경찰 심금품에 따르면 재모는 흔쾌히 자기가 돈을 받고 졸업장을 해결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주모와 류모는 인정하지 않았다. 주모는 자기는 수속 능력이 없을뿐더러 어떠한 비용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류모는 주모에게 스마트폰이 없기에 주모를 대신해 재모가 주모에게 같은 빛을 대신하여 받아줬을 뿐 수속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3,4년이나 지난 사건이다 보니 많은 증거들이 사라졌고 주모와 류모는 이를 인정하지 않아 사건이 영진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사건이 복잡하고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며 증거 체계가 완비하지 못하여 사건 처리 경찰들은 사건 상황을 상부에 보고하고 전단계 사건 처리 기제를 최적화할 것을 법제대대에 요청했다. 연길시공안국당위는 이 사건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팀을 인솔하여 사건 심사에 개입하고 사건전담팀을 설

립하여 증거 체인을 보충하고 사건을 조속히 해결할 것을 법제대대 형사사건심사중심 주임 류건외에게 지시했다. 사건전담팀원들은 즉시 사건 관련 인원들을 둘러싸고 수사에 들어가고 애매한 정보를 배제하고 인원, 사건 사실정보를 다시 처리하여 여러 단계의 위법사실에 대한 정확성을 규명했다.

한달후, 주모와 류모는 사기죄 혐의로 연길시공안국 집행사건처리중심에 소환되었다. 대량의 증거 앞에서 주모는 끝내 자신이 류모에게 증거발급인을 사칭하여 재모의 신임을 사취하도록 사주하고 재모를 속여 리모와 최모로부터 3만 3,700원을 편취한 범죄사실을 인정했다. 주모의 자백에 따르면 3만 3,700원중 8,000원은 류모에게 넘어간 후 류모가 전부 주모에게 되돌려주었고 나머지 돈은 그와 재모의 채무 변제 및 일상 소비에 탕진했다.

/리전기자



사례로 법 말하기-12

한자리에서 술 마시던 중 사망한 경우 함께 마신 사람 책임 부담

사례

왕씨는 퇴근후 세명의 동료와 함께 음식점에 가서 술을 마셨다. 술이 세순배 돈 후 왕씨는 동료 루씨와 내기를 했다. 쌍방은 왕씨가 단숨에 흰술 한병을 다 마시면 루씨가 그에게 500원을 주기로 약정했다. 이어서 왕씨는 흰술 한병을 단숨에 다 마셔버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왕씨는 바닥에 넘어져 일어나지 못했으며 병원에 호송해 구급했으나 효험을 보지 못하고 사망했다. 왕씨와 함께 술을 마신 세명의 동료는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가?

법률해석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세명의 동료는 공동 참여인으로서 권주, 부추김 등 행위가 존재하는바 상응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므로 반드시 상응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민법전 제 1165조의 규정에 의하면 당사자가 과실로 타인의 민사권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초래한 경우 마땅히 권익침해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법률 규정에 근거하여 당사자의 과실을 추정하는데 그가 자신에게 과실이 없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마땅히 권익침해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민법전 제 1168조의 규정에 의하면 2명 이상이 공동으로 권익침해 행위를 실시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마땅히 연대책임을 지야 한다.

/인민넷 - 조문판

파출소와 사회구역 손잡고 청소년 교양활동 진행



열띤 토론을 펼치고 있는 아이들

최근 연길시공안국 북산파출소에서 연길시 북산가두 단길사회구역과 연합으로 연길시 북흥소학교에서 평안 성장 관련 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활동은 학교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학생들의 패거리 사건 발생을 방지하고 감소시키며 청소년들의 심신 건강과 안전을 담보하는 것을 취지로 하였다.

활동에서 경찰들은 학생들의 연령과 심리 특성에 결부해 '학교 따돌림이란 무엇인가?', '따돌림의 위해성', '따돌림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등 여러 방면에 대해 강의하고 실제 사실을 결부해 해석했으며 관련 법률과 법규에 대해 설명했다.

활동을 통해 아이들은 학교 따돌림

은 일종의 위법행위로서 법적 처벌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어 펼쳐진 토론에서 아이들은 저마다 자각적으로 타인을 괴롭히는 나쁜 행위를 하지 않고 동학들의 이런 행위를 발견하면 제때에 제지시켜 서로 단결하고 화목하게 지낼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연길시 북산가두 단길사회구역 관련 책임자는 이번 활동은 학교 따돌림에 대한 아이들의 인식과 방법 의식을 강화하고 아이들이 정확한 인생관과 행위준칙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하면서 향후 관련 활동을 많이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성복특약기자

